

04  
VOL.

# 대전안전

10  
OCTOBER

기획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행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발행일 2024년 10월  
문의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042.530.3491



QR code

홈페이지([www.dsi.re.kr](http://www.dsi.re.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대전안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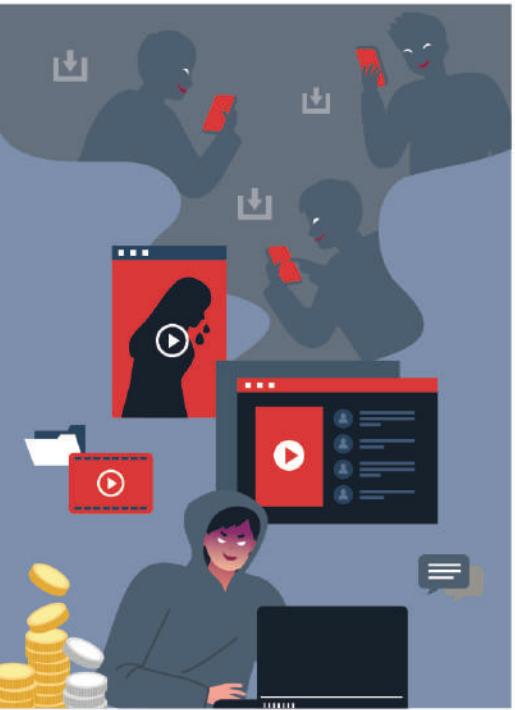
# Contents

2024 OCTOBER | VOL.10

## 기획 + 사이버 성범죄



## 인포그래픽



## VIEW + Daejeon Safety News



## 전문가기고

- 04**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항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김수진\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10** 온라인 아동성범죄자 프로파일과 형사사법적 대응  
최경식\_보스턴 대학교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16**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선미경\_육군교육사령부 성인지·양성평등교육 교관
- 20**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 인터뷰

- 22** 화면 뒤의 숨은 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원\_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발행일 2024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인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  
042-530-3500  
www.dsi.re.kr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203대전

## 인포그래픽

- 24**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1. 디지털 성범죄란?  
2. 피해자 지원  
3. 피해대처 가이드

## VIEW

- 30** 꿈들이와 함께한 일상 속 안전체험  
'제8회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 Daejeon Safety News

- 34** 대전시 안전 뉴스

## 안전상식

- 38** 위기탈출!!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행정안전부

#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항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폭력을 놀이화하고 수의화하는 '남성문화'에 대한 비판

김수진\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024년 8월, 딥페이크 합성기술을 이용한 "지인능욕" 텔레그램 방의 존재가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한 대학 내 피해자의 제보로 시작해,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름을 따른, 동네와 지역명을 따른, 군인·교사·기자·연예인 등 직업군을 따른 텔레그램 방들의 실체가 줄줄이 폭로되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은 친구, 애인, 직장동료, 선생님, 엄마·누나·여동생 등 친족구성원을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의 관계망을 공격했다. 사실 '지인능욕,' 보다 정확히는 여성은 '능욕'하는 이 가해 행태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sup>1)</sup>, '화장실 불법촬영, 소라넷, 버닝썬, '엔번방 사건'으로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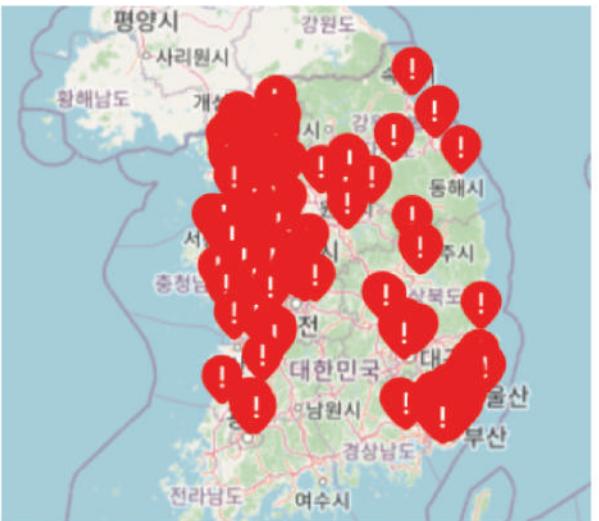
려진 텔레그램 성착취에 이어 작금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진화해왔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보신각 앞에 천이백여 명의 시민들이 긴급히 모였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합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울려퍼졌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성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일상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본고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혐오로 작동하는 온라인 남성문화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 젠더 관점에서의 제도적, 일상적 실천을 촉구하고자 한다.

## 딥페이크 성폭력의 현주소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해외에서 실시된 딥페이크 현황 조사<sup>2)</sup>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에서 수집한 딥페이크 영상물(전체 95,820건) 중 98%가 포르노였고, 그 중 99%가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53%가 한국인이었다. 2위인 미국(20%)과 3위 일본(10%)에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비중이며, 한국의 딥페이크 성폭력의 심각한 실태가 명백히 드러난다. 다른 수치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를 감각해보자. 한겨레 보도<sup>3)</sup>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텔레그램 방 하나에 무려 '22만 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우려와 경각심을 느낀 한 학생시민에 의해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가 제작되어 알려졌다. 피해가 발생한 학교를 표시한 붉은 점이 전국을 뒤덮은 지도를 통해서도 딥페이크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그림1 참고). 소수의 '괴물'이 저지른 예외적인 사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와 광범위함이 심각하다.

텔레그램은 익명 기반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으로 2020년 이른 바 '엔번방,' '박사방' 사건의 온라인 발생지이기도 했다. 2020년 당시에도 피해자의 이미지를 불법 합성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성 문구를 포함하는 유형의 '지인능욕'이라는 가해행태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만 언론과 정치권 등에 의해 그 피해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4년이 흐른 지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해행위는 더욱 빠르

그림1. 딥페이크 성폭력이 발견된 학교들이 지도상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딥페이크지도(deepfakemap)' 캡처화면을 2024년 8월 27일자 여성신문 기사<sup>4)</sup>에서 재인용

고 편리해졌다.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해자들은 피해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합성물 제작 이미지 한 장당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폭력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동시에 익명의 뒤에 숨은 가해자들은 '어차피 못 잡는다'며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한다. 그 사이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고 모욕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물화하는 가해 행태는 피해여성의 "겁지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모하여 피해자가 속한 생활세계의 신뢰와 기반을 망가뜨리려는 방식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진화해왔다.

뿐만인가. 실제 피해지원 현장에서 마주한 많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이 가해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포 피해가 발생한 불법사이트가 해외 서버 기반이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유동 IP를 사용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제도적,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곤 한다. '신고해도 못 잡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조롱과 비슷한 말을 경찰로부터 들으며 고소장 접수가 만류 당하기도 하고 피해자더러 가해자를 특정해 오라는 얘기도 듣는다. 이렇게 신고조차 하지 못하면, 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미온적으로 그치면, 가해자 색출과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sup>1)</sup> 가해용어로서 '리벤지포르노'란 주로 이별 후 복수 목적으로 전 배우자나 애인의 성적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가해행위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정당한 행위로 서이별을 한 피해자에게 복수를 유발할 만한 거리가 있었다는 식의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해자 관점의 혐오표현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성시민운동에 의해 "불법촬영물"로 명명하는 용어 개선이 이뤄져왔다. 이 점을 강조하며, 본고는 여성의 인격을 물화하고 모욕하는 폭력의 성격과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따옴표 친 '리벤지포르노'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sup>2)</sup>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deepfake-porn-survey>

<sup>3)</sup>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76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764.html)

<sup>4)</sup>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64>

피해자보다 성폭력 가해자에 오히려 관대한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여성들은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자마자 SNS 등 온라인에 게시했던 자신들의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기 시작했다. 어느 중학생의 말마따나 주변의 모든 남학생들이(잠재적) 가해자는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말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언제쯤, 얼마나 더 많은 폭력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나 멈출 수 있을까. 어떤 방향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다음으로 사이버성폭력을 대처하는 한국사회의 법 제도의 현황과 그 공백을 소개해본다.

### 과연 법이 없어서 문제인가?

과연 법과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 것일까? 아니다.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미 7년 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을 내놓았었던 바 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실행해왔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설립했고, 각 지자체 및 지역 특화상담소 사업을 통해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피해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2020년에는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통과하며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하고 처벌하는 법적 기틀 또한 강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담은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제22조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개정, 신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이미지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디성센터'와 같은 기관들 또한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은 여전히 법제도망에서 (어떤 부분만 피해로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식으로, 혹은 다층적이고 연속적인 피해경험의 총체가 법적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식으로) 조각나고 미끄러지는 현실을 곳곳의 피해지원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과 같은 '허위영상물' 관련 1심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내용<sup>5)</sup>에 따르면, 피고인 중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법정 최고형 5년(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 피고인 125명 중 5명에 그쳤다.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어리다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거나,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사이버성폭력의 피해경험은 단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는 지금 당장 피해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파일을 소지하고 재유포할 수 있다는 유포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사와 법률 과정, 공적 피해지원 제도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래 상술할 바와 같은 내용들이 피해 회복에 도리어 난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구성요건이 삭제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에 의해 협소하게 해석되어 가슴이나 성기 같은 신체 부위가 포함되지 않은 피해 이미지는 디지털성범



<sup>5)</sup>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508\\_36515.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508_36515.html)

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곤 한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여도 가해자가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엉뚱한 쟁점이 되어 피해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이다.<sup>6)</sup>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는 구성요건 또한 피해경험을 유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폐쇄적인 일대일, 개인 간 사적대화방을 통해 피해 이미지가 유포되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협소하게 판단되어, 텔레그램 같은 개인간 메신저 공간은 사실상 수사·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성폭력처벌법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가해자들끼리 피해자에 대해 나눈 가해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가에 엉뚱하게 초점이 맞춰져, 피해경험이 피해로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감각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과 실제 법 해석 간에도 괴리가 큰데, 개인 간 채팅방에서 이뤄진 성폭력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식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디지털성범죄인가 아닌가?

- 일상사진과 개인정보가 유포되며, 성적이지 않은, 그러나 젠더 권리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욕이 있었다. 성폭력인가?  
[...]
- 대부업체에서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보증금처럼 활용했다. 대부업체가 이 이미지를 유포할까봐 걱정된다. 이 여성에 겪는 것은 무엇인가?
- 평소 섹슈얼한 사진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이 사이에서 불법촬영은 불가능한가? 이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의 전송은 성폭력이 아닌가?
- 어떤 여성이 어제는 성관계 영상에 동의했는데, 오늘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거짓말을 하는가?
-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рап시고 여성을 촬영하였다. 불법촬영인가?
- 준강간 상황이었으나 가해자가 기억을 잊은 사이에 사진을 찍었을지 더 걱정된다. 피해경험자가 뭘 모르는 것인가?
- '섹시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여성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 합성 편집 가공, 비동의 유포를 겪을 수 있는가?
- 파일은 물건인가, 아닌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지인가, 아닌가?
- 피해경험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으면, 피해는 없는 것인가?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분리되어 있는가?

\* 김여진(여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2024. "디지털성범죄'에서 '온라인', '젠더', '폭력'으로의 전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집담회]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자료집, 21쪽.

위 질문들을 소개한 이유는 어떤 폭력이 범죄인가 아닌가를 보다 정교하게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이버성 폭력을 대할 때 다층적이고 다각도의 맥락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은 X(구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공간이나 지난 9월 21일에 있은 해화역 시위 등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급한 불 고듯 불법 합성물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과 정책 방안을 내놓는 중이다. 물론 법과 제도에 미흡함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수사 강화 역시 피해대응에 있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간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소외된 많은 피해자와 피해경험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사이버성폭력을 젠더 폭력으로 이해하는 것, 쉽게 말해 성별로 인해 피·가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맥락을 바라보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sup>6)</sup>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불법 합성물을 범죄로 인정하는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이 삭제되는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는 이른바 "알면서"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등 사이버 젠더폭력에 대한 입법부의 미흡한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 보완의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 왜 남성문화인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여러 여성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작금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온라인 남성문화를 뒤엎자는 공동성명서<sup>7)</sup>를 발표했고, 이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생취하자”는 구호 아래 천이백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모여 사이버성폭력을 방조해온 플랫폼과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외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있은 지 며칠 후 필자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몇몇 지인들로부터 ‘왜 남성문화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제의 원인을 ‘남성문화’라고 명명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운동의 장으로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냐는 반감과 우려, 궁금증이 섞인 물음들이었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종종 마주하게 되는 반응이기도 하다. 왜 ‘남성문화’가 문제인가?

첫째. 기술과 남성 중심적 여성 혐오 문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공론화된 후, 9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폭력의 주요 원인이 SNS의 비정상적인 발달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다른 한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기술은 매개일 뿐이라며 텔레그램에 대한 작금의 경찰 수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생취하자〉 현장 사진<sup>8)</sup>

의지를 꺾고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축소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폭력의 원인을 기술의 폐해로만 이야기하거나, 기술의 중립성을 주장하며 이를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는 모두 하상이며 기만이다. 여성은 ‘능욕’하는 형태로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화장실 불법촬영,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버닝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어, 작금의 딥페이크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기술들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 그 바탕에는 사회적으로 버젓이 용인되고, 범죄라는 법적인 차원으로 포획될 수 없는, 그러나 여성혐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온라인커뮤니티와 미디어가 있음을, 그 파급력을 우리는 결코 모르지 않는다. 피해 이미지와 차별적, 폭력적인 표현들이 쉽게 삭제되거나 제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SNS 계정과 글들은 “계정 폭파”를 목적으로 한 악성신고들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차단, 삭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술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온라인공간은 이처럼 이용자 및 운영자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무결하고 중립적인 매개일 수 없다. 성평등한 기술문화를 위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실천과 개입,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부의 규제가 총체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문화는 또한 권력의 문제이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이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군인·교사·기자라는 직업군으로 묶인 방들과 엄마나 누나, 여동생과 같은 친족을 합성한 실태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이 더욱 경악스러웠던 이유는 어떤 사회적 통념에서의 금기나 선을 넘은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종류와 내용, 맥락과 상관없이 오직 성별 권리만이 남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

여성혐오로  
공고해지는 남성연대의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일상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문제적인 특정 개인의 행동으로 여기거나, 그 특정 가해자 개인만을 엄벌하는 것으로 발본색원할 수 없는 폭력이다. 가해의 관점에 연대하는 효과로 마이크를 휘는 이준석 의원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700명’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성폭력의 뿌리깊은 원인이 문화에 있을 때,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어떤 관계성이 바탕에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동료시민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읊란한 것으로 물화하고 놀이화하는 여성혐오를 강화, 장려, 묵인하는 어떤 관계망이 작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필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후로 다년간 온라인 남성문화를 연구해오며 디시인사이드, 일베, 인터넷방송 등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놀이문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그들은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행태를 익명 뒤에 숨어, 애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는 이를 열심히 숨기면서도 왜 계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탐구해왔다.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인격이 놀잇감이 되고, 그렇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형님” 대우를 받으며 명예와 위신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괴롭힘의 공모자가 되어 단결과 친목, 연대를 형성하는 장면들을 보아왔다. 물론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낙인이 찍히고 매도를 당한다. 이는 문제를 느끼는 참여자가 쉽게 개입하지 못하게 만든다.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게시판 등에서 여성참여자는 불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남성인 척 말투를 바꾸기도 한다. 이것이 여성혐오로 작동하는 남성문화, 남성연대의 강화가 아니면 무엇인가. 여성혐오를 표출하는 남성들을 영웅시하는 남성들 간의 관계성과 권리 쌓기는 비단 온라인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육설로 변질되어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될 정도로 만연하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어떤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주변의 여성을 상대로 얼마나 심한 성희롱을 했는지가 동료 남성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선망’ 받는 뒤틀린 남성성이 ‘놀이문화’로 자리잡아 또래 문화를 통해 학습되고 강화된다. 이는 텔레그램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피해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유포했는지, 어떤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평소에 사용하는지 등의 문제로 쉽게 선을 그어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여성혐오로 공고해지는 남성연대의 권리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일상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관점의 문제이다. 남성문화를 뒤엎자는 절박한 외침은 성평등 관점의 포화상태를 지향한다. 하나의 방향으로, 법적인 해결을 아우르고 넘어서는 차원에서 남성문화에 대한 개입과 변화를 촉구한다. 엔번방 때도 그랬듯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 불끄기에 급급한 듯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기술적, 법적 대응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습에 기시감이 들고 우려부터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젠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없이 온라인 성폭력을 디지털적인 것으로, 법적 차원에서의 엄벌로만 강조하는 것은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제대로 막을 수도 대응할 수도 없게 한다. 앞 절에서 상술하였듯 법과 제도적 피해구제들이 초기의 성립 취지, 맥락과 분리되어 마치 매뉴얼처럼 기계적으로 남는 모습을 많이 봄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이 아닌 입체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해를 외면하고 축소하고 누락시키는 제도와 일상관계망의 경험들을 통해 수치심 같은 것을 뒤늦게 알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 법, 제도가 마련되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 제도 전반에서 젠더 관점에 입각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행이 질질하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취사선택을 하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혐오로 작동하는 남성문화는 단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남성문화를 근절하자는 변화 또한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하고 실천하자. 성평등을 위해 오래도록 연대하자.

7) <https://www.cyber-lion.com/statements/?q=YToxOntzOjEy0iJrZXl3b3JkX3R5cGUI03M6MzoiYWxsljt9&mode=view&idx=87976454&t=board>

8) <https://www.cyber-lion.com/21/?q=YToxOntzOjEy0iJrZXl3b3JkX3R5cGUI03M6MzoiYWxsljt9&bmode=vie&w&idx=98320583&t=board>

# 온라인 아동성범죄자 프로파일과 형사사법적 대응

최경식\_보스턴 대학교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온라인 아동 성착취는 빠르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정보화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학대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성착취 자료의 생성 및 유포, 성학대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들이 관광 성매매, 인신매매, 성추행, 불법 인터넷 성인물사이트, 온라인 유인 및 아동성범죄자로부터 받은 원치 않는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동 성착취 자료의 소지, 제작 및 유포는 가장 일반적인 아동성범죄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이 글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책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동 성착취물(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s)의 소지는 아동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범죄구성 요소로 작용 한다. 온라인 아동성범죄자는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CSAM 콘텐츠를 수집하고, CSAM 전용 온라인 네트워크에 가입 하여, 피어 투 피어(P2P) 네트워크와 채팅룸을 사용하여 자료를 공유한다. 그리고 P2P 및 채팅룸을 통해 CSAM 자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이 같은 불법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고 있다.

미국실종아동센터(NCMEC)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온라인 아동 성범죄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는 빠르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정보화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학대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성착취 자료의  
생성 및 유포, 성학대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2천93만 건이 보고되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향후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 다크 웹사이트,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기타 인터넷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자들이 아동성착취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와 수단들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단 간 암호화(E2EE) 기법,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시스템이 아동 학대의 지원수단으로 변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N번방 스캔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이버 성매매와 텔레그램의 암호화 채팅방을 통한 성착취 사진 및 비디오의 유포가 이루어졌다. 피의자의 비밀 방에서는 수백 명에서 1만 명까지 동시에 접속한 라이브 스트리밍 조회수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불법성착취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본다. N번방 스캔들과 유사하게, 미국 법무부(DOJ)는 폭력적인 강간 비디오와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Michael Rahim Mohammad를 기소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일반 웹과 다크 웹에서 동시에 운영되었으며, 사용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약 2천 개의 비디오 및 이미지가 포함된 CSAM 콘텐츠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지불하거나 새로운 성착취 콘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불법 콘텐츠에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미법무부는 다크 스캔들 웹사이트와 연결된 303개의 가상 화폐 사용자들의 계정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하였다.

## 온라인 성범죄자의 프로파일

이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성범죄자의 분류 중 CSAM 수집가의 분류법을 소개한다. 은밀형(Closet Type), 고립형(Isolated Type), 코티지형(Cottage Type) 및 상업 수집가형(Commercial Collectors Type)(Beech외, 2008; Choi외, 2023). 수집가들은 온라인 성폭력 콘텐츠를 분류 및 색인화하며, 범죄학자들은 종종 이를 수집가증후군으로 설명한다.

Choi and Lee (2023)에서 제시된 아동 성학대 자료(CSAM) 관련 개인의 네 가지 구분된 가해자 유형

### 은밀 수집가

- 아동과 직접적인 성적 접촉 없이 CSAM을 보는 개인유형.

### 고립 수집가

- CSAM을 소비하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유형.

### 코티지 수집가

- 고립 수집가와 비슷하게 CSAM을 보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 하지만,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에 연루시킴.

### 상업 수집가

- 이익을 목적으로 CSAM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유형으로, 범죄 사업으로 이용함.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은밀 수집가들은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비밀리에 수집하지만 아동과의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다. 고립 수집가들은 아동성착취 콘텐츠를 수집하면서 아동과의 성적 목적의 접촉을 시도한다. 코티지 수집가들은 그 행위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들과 서로 컬렉션을 공유한다. 상업 수집가들은 성착취물 생산 및 유포를 통해 이익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아동 성착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망을 피해 비밀리에 유통한다. 수집가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온라인 CSAM 사용자는 그들의 성적 긴장을 완화하고 성적인 환상에 몰입하여,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용한다. 코티지 수집가들이 비슷한 의도를 가진 다른 그룹과 이미지와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집가 유형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아동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 온라인 CSAM 사용자의 특성

연령. Wolak과 동료들(2011)은 CSAM 사용자를 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초기 성인으로 확인했으며, Clevenger와 동료들의 연구(2016)는 CSAM 생산자가 주로 30대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위장 수사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이 체포한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 피해자보다 적어도 열 살 이상 많았으며 중산층 출신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또한 피해자의 48%가 13세에서 14세 사이였다고 지적하였고,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피해자들이 웹에서의 개인과의 접촉을 통해 성매매 등의 위험한 아동 성착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별. 위의 연구들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뚜렷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아동범죄 연구센터는 2000년과 200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결과 가해자의 99%가 남성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작된 성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성인 남성 가해자에 의해 젊은 여자 아이가 착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일 경우는 25%를 차지했다. 동성애자이거나 성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아동들이 착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소년들이 수치심 때문에 성적 피해를 숨기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소년들의 성착취 데이터 부족으로 정확한 피해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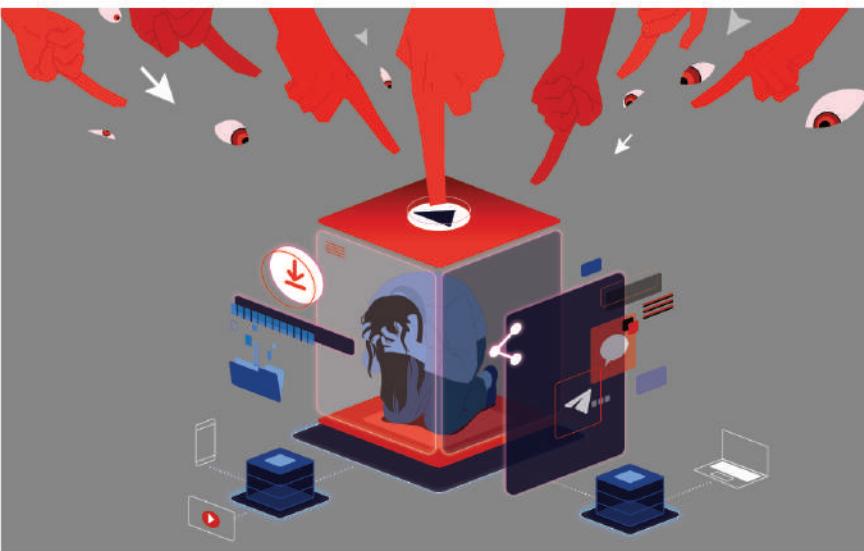
## 온라인 착취 및 그 제재 유형

미성년자의 온라인 성적 착취는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며, 이 중 일부는 사이버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로 현실 세계로 확장된다. 여러 온라인 성적 착취 유형으로 아동 포르노, 온라인 그루밍, 아동성착취 장면의 라이브 스트리밍, 성매매 관광, 인신매매, 미성년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같은 범죄들은 각기 다른 기소 결과와 형량을 가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성착취 콘텐츠의 소지, 제작, 유포가 가장 흔한 유형이다. 특정 가해자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학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콘텐츠를 수신, 유통,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아동 성착취 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형량 위원회(USSC)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69,425 건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그 중 1,414건은 아동의 성착취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성공적으로 식별된 사

례 중 99.1%의 가해자가 기소되어 평균 104개월(약 8.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유통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평균적으로 더 높아 136개월(약 11.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일반 평균인 105개월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월간 낮은 70개월(약 5.8년)에 불과했다.

최근 2021년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고 할 수 있지만, n번방 모방 범죄 예방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양형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정책 시사점 법집행기관 역량강화

CSAM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률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적 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온라인 성범죄 특성, 가해자의 전과경력, 그리고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감시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효과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행동 분석하고 최신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수사요원들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컴퓨터 포렌식 및 디지털 증거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사이버 사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별 교육 과정은 경찰들이 온라인 아동 착취 사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물을 식별하고 획득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지원하는 최신 오픈소스 도구들의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및 기타 인터넷 연결 장비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의 수사까지 두루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 크롤링 및 데이터셋 생성, 위치 추적 및 분석, 수사 정보 분석에 기반한 암호화폐 포렌식 추적에 초점을 맞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대화앱들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이가 발전되고 있는 AI 기술로 인해 CSAM 자료는 비디오와 이미지 형태로 정기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CSAM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된 챗봇의 출현은 법집행 기능 강화에 큰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기관은 명확하고 포괄적인 형량 지침과 함께 고도화된 기술적 수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CSAM 범죄에 대한 공식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자의 범죄 이력,



**법 집행 기관 및 관련 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이버수사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인구통계, 범죄의 성격 및 방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AI와 같은 고급 디지털 기술이 범죄에 사용될 때, 법집행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미래 지향적인 사법 대응을 구축함으로써, 신종 온라인 위협의 광범위한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Choi 외, 2024).

## 사이버범죄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범죄 방지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이 사이버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상범죄는 사이버 불링, 성적 메시지 교환, 유인, 온라인 성 착취 등을 포함한다. 학교에서는 윤리적 기준과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사이버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이 같은 교육과정은 기술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을 위해 직장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자와 부모가 아동의 사이버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예방 인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예방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고, 테크날러지의 좋은점과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균형있게 어떻게 온라인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이나 부모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면, 학교 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자나 법집행 기관에 보고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학교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법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체계화된 사이버 사건 대응 정책을 학교 비상 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결론

온라인 아동성폭력 범죄는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법집행기관에 신고될 확률이 매우 낮다. 법집행 기관 및 관련 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이버수사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이버 위협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법집행 기관은 최신 사이버 범죄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정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아동성폭력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선미경\_ 육군교육사령부 성인지·양성평등교육 교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플랫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사람을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면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법률에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된 바 없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한 바는 없다.<sup>1)</sup>

디지털 성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지만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sup>2)</sup>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유형과 예시

피해유형	예시
불법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li> <li>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li> </ul>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p>
합성·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의 일상 사진을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 등</li> </ul>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p>
비동의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li> <li>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성적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li> </ul>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p>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비동의 성적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li> </ul>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p>
유포불안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영상을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사이버 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li> </ul> <p>「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p>

출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인권–결과보고–2024–001, p. 25면

##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페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으로 피해양상이 다양해졌다.

2020년대 초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급증하였고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다크웹의 등장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성적 콘텐츠의 거래나 유포가 수사기관을 피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은밀하면서도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거나 조작된 성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실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의 발전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1) 조준택·송연진·안재경.(2024).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3-AB-11, p. 25면.

2) 제주 YMCA 통합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이란' [http://www.woman3040.or.kr/sub.asp?maincode=629&sub\\_sequence=653&sub\\_sub\\_sequence=2024.9.4.최종접속](http://www.woman3040.or.kr/sub.asp?maincode=629&sub_sequence=653&sub_sub_sequence=2024.9.4.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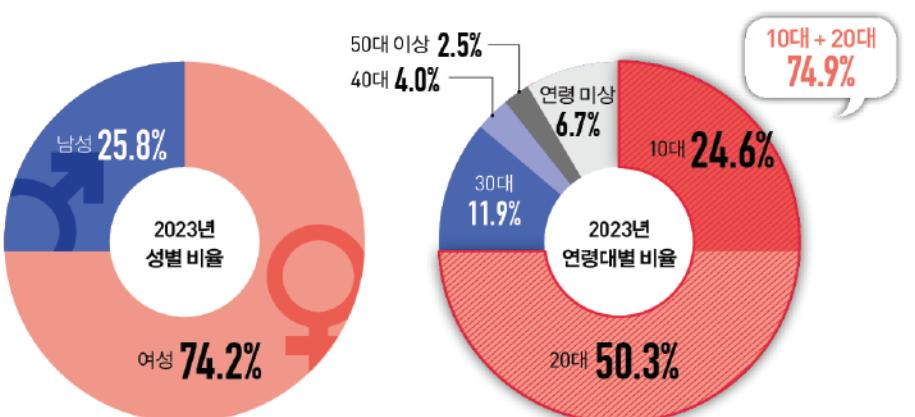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자료: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총 8,983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총 275,520건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45,416건(89.1%)이 피해영상을 삭제지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지원 28,082건(10.2%), 수사·법률지원 연계 1,819건(0.6%), 의료지원 연계 20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74.2%), 남성(25.8%)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에게도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50.3%)가 가장 높았으며, 10대(24.8%), 30대(11.9%) 순으로 나타났다. 10~20대에서 피해가 가장 높으나, 다양한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국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관 또는 단체는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전 연령대에 걸쳐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따로 구분하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 성폭력 예방교육 중 부분

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형사·형사정책연구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2. 디지털 성범죄 동향 및 시사점

동향분석	내용
발생 건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버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음.</li> </ul>
유형별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성폭력은 전체 사이버범죄 중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li> <li>그러나, 그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비율만큼 작지 않음</li> </ul>
피해자 지원 센터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요청의 수가 지속해서 많이 증가</li> <li>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 증가를 시사</li> </ul>
시사점	내용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한 행동과 디지털 윤리에 대한 예방 교육의 필요</li> </ul>
법적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포 불안, 유포 협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 강화 필요</li> </ul>
피해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요청의 증가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특히,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중요</li> </ul>
기술적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성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적 대응 강화 필요 (ex: 불법 콘텐츠의 자동 감지 및 차단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시급)</li> </ul>
사회적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평등한 문화의 조성이 필요, 장기적으로 범죄 발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li> </ul>
피해자 중심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의 권리와 필요를 우선시하는 접근 필요</li> </ul>

출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AB-11, p.35면을 바탕으로 재구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유포가 되며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지능화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교육,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과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권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불법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법 규정을<sup>4)</sup>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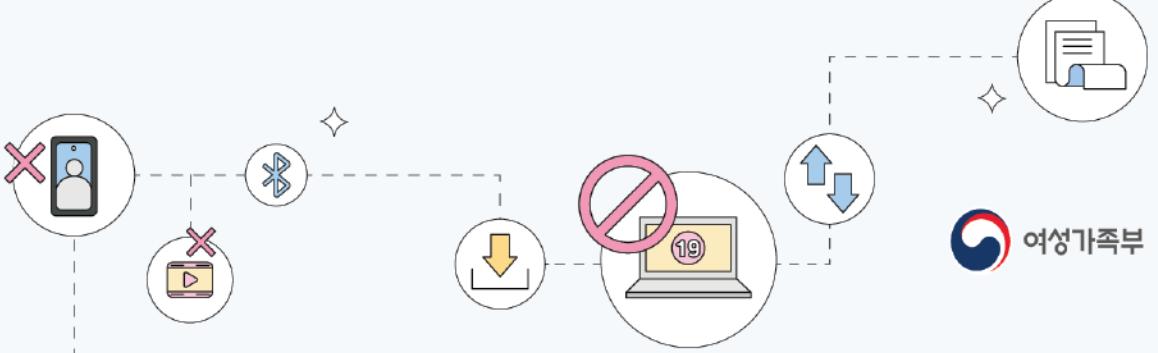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4\) 미디어오늘, 반복되는 디페이크 성범죄...진짜 대책을 찾자, 2024.8, \[## 참 고 문 헌\]\(https://www.media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5. 검색일자 2024. 9\). asp?maincode=629&sub\_sequence=653&sub\_sub\_sequence=. 검색일자 2024. 9\)</a></p>
</div>
<div data-bbox=\)](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94&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EB%94%94%EC%A7%80%ED%84%8B%88%EC%84%8B1%EB%B2%94%EC%A3%84. 검색일자 2024. 9)</a></p>
</div>
<div data-bbox=)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http://www.woman3040.or.kr/sub/](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94&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EB%94%94%EC%A7%80%ED%84%8B%88%EC%84%8B1%EB%B2%94%EC%A3%84. 검색일자 2024. 9)</a>)</li>
<li>조준택·송연진·안재경.(2024).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AB-11.</li>
<li>제주 YMCA 통합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이란' (<a href=))
- 미디어오늘, 반복되는 디페이크 성범죄...진짜 대책을 찾자, 2024.8, ([2024 | VOL.4](https://www.media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5. 검색일자 2024. 9). asp?maincode=629&sub_sequence=653&sub_sub_sequence=. 검색일자 2024. 9)</a></li>
<li>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인권-결과보고-2024-001</li>
</ul>
</div>
<div data-bbox=)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b>안전수칙 01</b>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b>안전수칙 02</b>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b>안전수칙 03</b>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b>보호자 7 가지 안전수칙</b>		
<b>안전수칙 04</b>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일릴 것을 당부합니다!	<b>안전수칙 05</b>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b>안전수칙 06</b>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b>안전수칙 07</b>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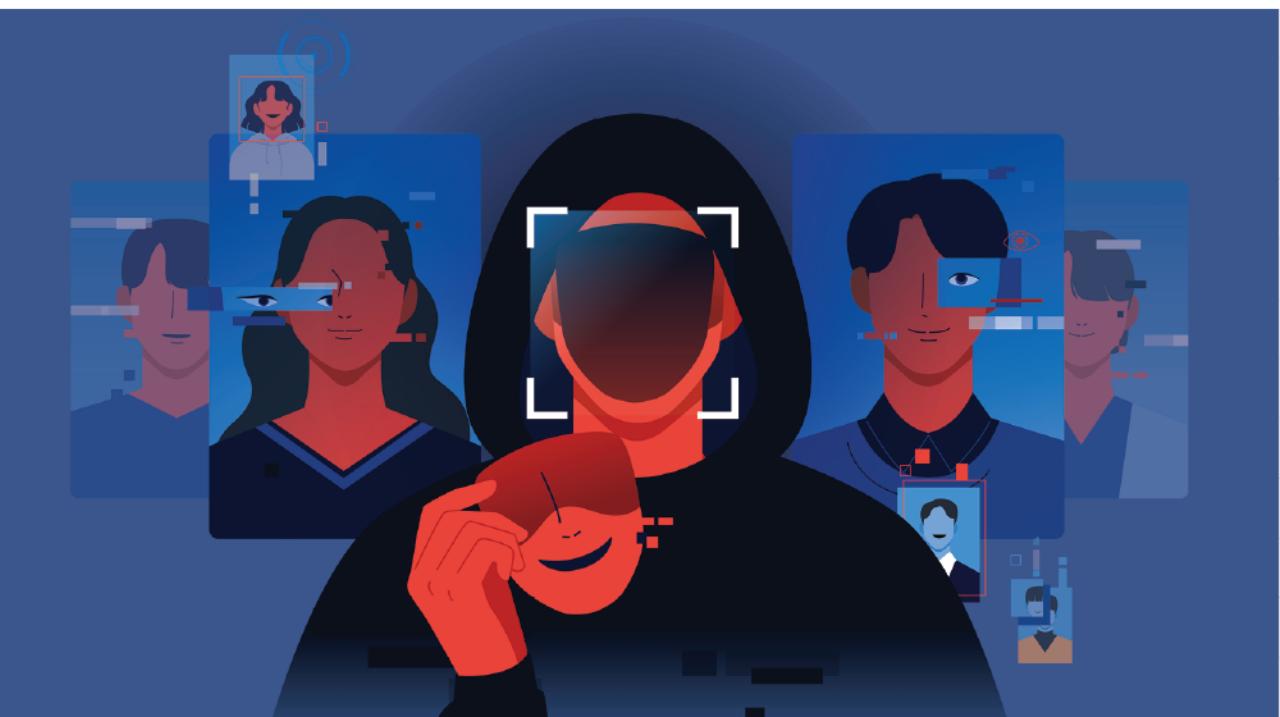
<b>안전수칙 01</b>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b>안전수칙 02</b>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b>안전수칙 03</b>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b>아동·청소년 7 가지 안전수칙</b>		
<b>안전수칙 04</b>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b>안전수칙 05</b>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b>안전수칙 06</b>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b>안전수칙 07</b>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 행동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 화면 뒤의 숨은 범죄, 디지털성범죄

김 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를 낳는 온상이 되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성희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 피해는 온라인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Q** 대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사건이 다수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사건도 접수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음란물 유포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위의 사건들의 경우 한 달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대전지역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약 2.9%에 해당하는 9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통계 연보의 경우 아직 공개 이전으로, 전국적인 발생 건수나 검거 건수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전경찰청의 경우 100건 이내의 사건이 발생하고 90명 이상 검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 지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59건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울산의 경우 34건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종의 경우는 18건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충남은 129건 그리고 충북은 54건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경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통계는 경찰청에서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해 신고, 접수되는 발생 건수와 사건 수사 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요즘 딥페이크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피해사례는 어떤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확인되는 딥페이크 사건의 주 피해자 연령층은 10대입니다. 물론 2~30대의 피해자가 일부 확인되나, 주요 피해자의 연령층은 10대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의 경우,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광고하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는 실정입니다.

**Q** 그렇다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가해자의 검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해자의 검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같은 범행 피의자들은 검거 회피를 목적으로 다크웹, 토르 브라우저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개발한 주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 피의자들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피의자는 3~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피의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Q** 최근 정부에서 딥페이크 소지, 구입, 시청을 할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입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호기심과 재미 삼아 딥페이크에 접근하는 이용자가 다수이므로, 교육기관과 사전에 다방면의 예방 교육을 통해 재미삼아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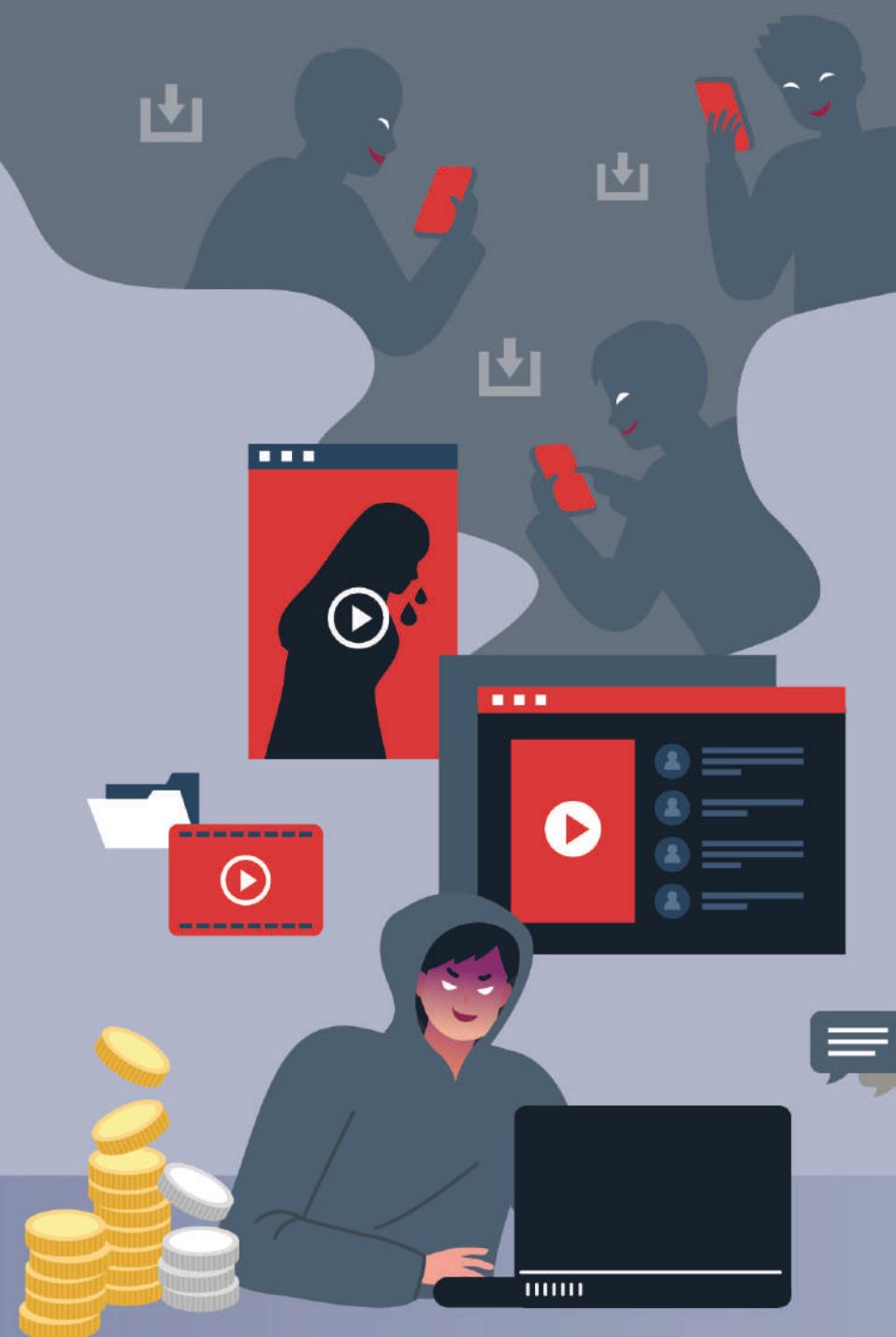
인터넷은 실제 내 모습을 상대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명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지나친 사생활 노출이나 대가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하는 상대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을 대상화·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합니다.



## 1. 디지털 성범죄란?



“그냥 보는건데 어때?” 아니요, 그것도 폭력입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영상을 봐서도 안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불법촬영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유통, 공유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불법합성물 제작, 배포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 사진과 합성후 후 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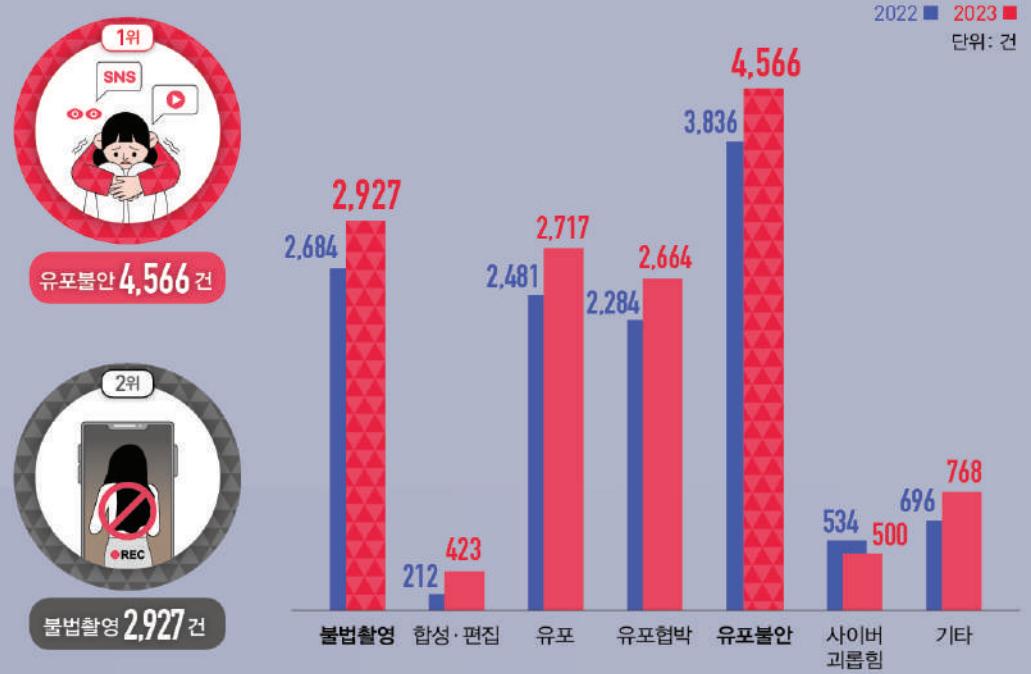


#### 유포 협박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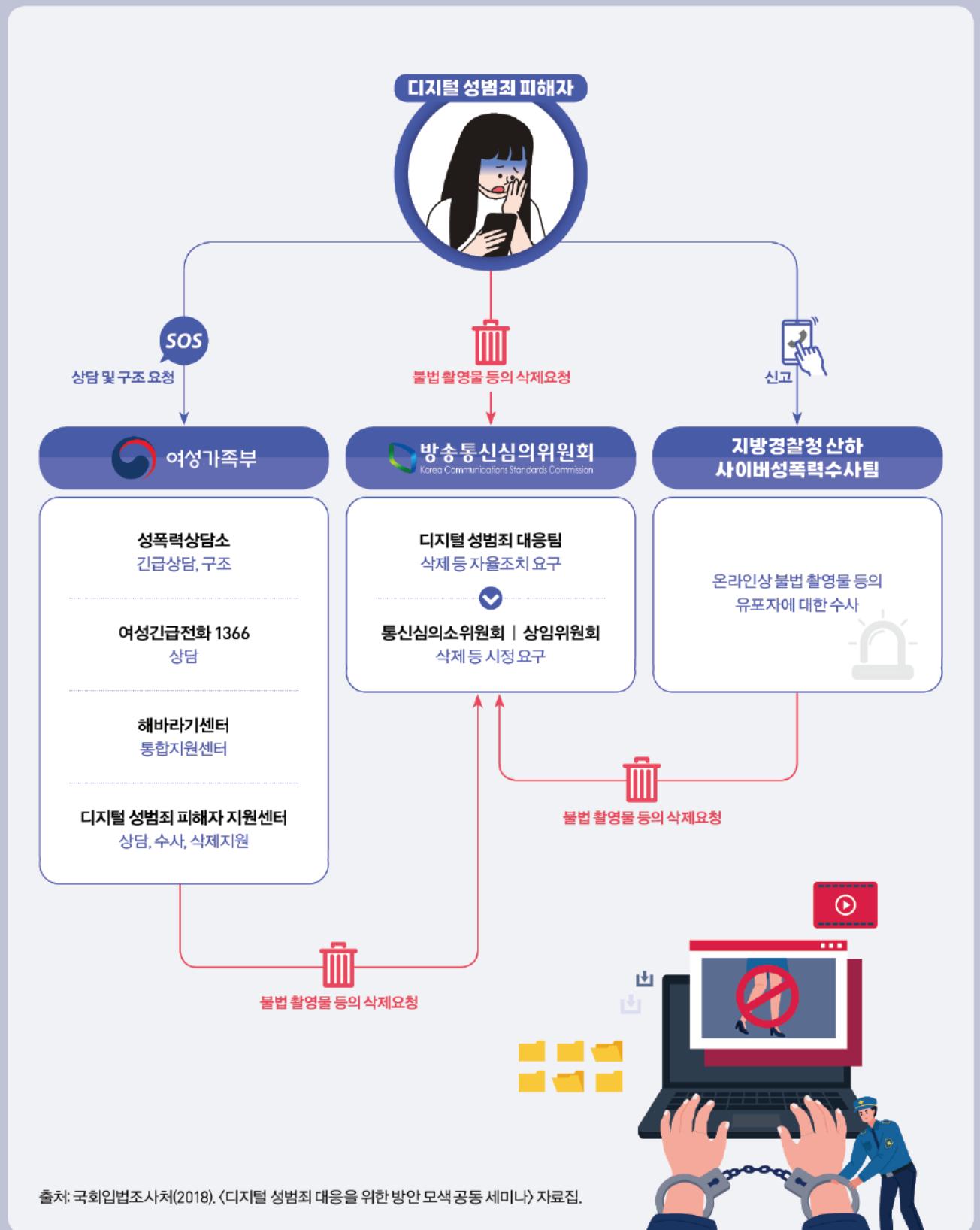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 2.

##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 피해자에게 보호·지원 제도안내

-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접속→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 신고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수사)
-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배석)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 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녹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번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안내해드립니다.
- 삭제 지원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d4u.stop.or.kr)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수사 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 심리 지원 (심리 지원)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해드립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임시숙소 제공/전문시설연계/순찰 강화 등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률 지원 (법률 지원)
-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d4u.stop.or.kr)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증거확보, 채증자료 작성 지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www.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주거 지원 (주거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피해대처 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촬영

#####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어떻게 대응하나요**

- ① 경찰서 신고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② 카메라 증거 확보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③ 단서 기억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④ 증거제출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불법합성 (딥페이크)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한 경우

**» 어떻게 대응하나요**

- ① 피해 사진·영상물 원본 보관·캡처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② 대화방 유지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유지해주세요.
- ③ URL(링크주소) 확보  
유포 확인된 경우 URL을 확보하고 캡쳐해주세요.
- ④ 제보를 받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에 접속하지 마세요.
- ⑤ 경찰신고  
112에 신고하세요.  
믿을 만한 어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세요.
- ⑥ 학교의 도움을 받으세요  
초·중·고등학생은 선생님이나 위클래스에 알리세요.  
대학생은 학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 참고사항**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하나요?  
SNS 계정은 증거 확보 이후에는 비공개 설정이나 비활성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포피해

#####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 어떻게 대응하나요**

- ① 피해증거 확보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② 경찰서 신고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침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③ 고소장 작성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④ 삭제요청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현행법상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촬영물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 모두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됩니다.

#### 유포협박

#####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 어떻게 대응하나요**

- ① 증거취득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경찰신고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침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참고사항**  
만약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촬영물 일 경우 협박죄 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꿈돌이와 함께한 일상속 안전체험

제8회

#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리 모두 안전 영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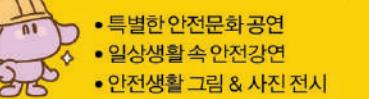


이번 축제는 대전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와 내빈들이 함께한 개막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전시가 야외에서 진행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안전체험 한마당에서는 안전문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마당, 화재대피 재난대응 체험 등 다양한 생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 그리고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뿐만 아

니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은 함께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대전시민 모두가 즐거웠던 '제8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그날의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관람마당



- 특별한 안전문화 공연
- 일상생활 속 안전강연
- 안전생활 그림 & 사진 전시

## 체험마당



- 화재대피 재난대응 체험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 음주운전 예방, 호신술 배우기

## 어울림마당



-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 페이스페인팅, 생존배낭 만들기
- 안전체험 참여 이벤트



INTERVIEW  
대전시민  
인터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은  
Safe대전

지준섭\_서구둔산동

저는 이번 Safe대전에서 아이와 함께 생소해(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궁금해) 체험 부스에서 OX퀴즈를 참여했는데,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부모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체험 활동들이 손쉽고 직관적으로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그중에서도 차량전복체험이

아파트 화재 대피  
체험으로 안전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

이우인 어린이\_중구목동

저는 경량 칸막이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피신하는 체험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게 돼서

아들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

오승택\_서구 월평동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왔는데, 아이가 3D 펜 체험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가장 유익했어요.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문제인데,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생존 수영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체험을 통해 앞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안전화 보호구 착용  
체험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

임수희\_세종



가장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차가 뒤집히는 상황을 체험하면서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체험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유익했습니다. 아이에게도 큰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유익한 체험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아이와 함께 행사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 Safe대전에는 재미있는 체험 부스가 정말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 행사가 열리면 꼭 다시 오고 싶어요!

INTERVIEW  
대전시 임목  
시민안전실장  
인터뷰



내가 지킨 것이 나를 지킨다!  
제8회 세이프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안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종종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안전사고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fe대전은 이런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행사로 우리 모두가 '안전 영웅'이 되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돋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은 결국 '안전한 대전 조성을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Q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요?

올해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바탕으로, 29

개 기관과 단체에서 54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정 연령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아

이들을 위한 폴리온과 함께하는 지문 등록, 지진 체험, 풍수해 체험, 물 소화기 사용 체험, 수상 안전 체험, 어린이 재난 안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체력 100을 비롯해, 음주 고글 체험, 경량 칸막이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산업안전 VR 체험, 실버 운전

Q 올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와 보

이스 피싱에 대처하기 위한 홍보관이 마련되

었고, 아파트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

는 경량 칸막이 체험,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 한 수상 안전 체험, 그리고 고령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실버운전 캠페인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일시: 2024. 6. 19. 장소: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



대전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7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안전문화 운동 추진 대전협의회 및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과 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문화를 확산하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

일시: 2024. 6. 25. 장소: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 2층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5개 자치구, 6개 경찰서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는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범죄예방 대책 발표, 자유토론, Q&A,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센터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대전시 범죄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2024 하나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실시

일시: 2024. 6. 27. 장소: 대전광역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대전시는 2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2024년 하나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대전시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유성구,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군·경·소방 등 20여 개 기관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사용하여 시와 원안위 등 각 방사능비상대응본부와 구호소,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실 등 재난 현장 4개소를 연결하여 기관별 훈련상황을

함께 공유하며 진행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 훈련은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방사능재난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 동구,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컨설팅 회의 개최

일시: 2024. 6. 28. 장소: 대전동구청 9층 안전정책과 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 동구지역의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2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 동구청 안전정책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박사, 동구 안전보건·질병관리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동구 6개분야(범죄, 교통,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화재)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점검하고, 자살률, 감염병 지표 등의 변동 폭을 지적했다. 취약지역의 자살 사망자 수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마련 등 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살과 전염병 예방에 있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동구,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행

일시: 2024. 9. 27. 장소: 대전 동구청 9층 안전정책과 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27일, 대전 동구청 안전정책과 9층 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제3차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신은정 본부장과 동구 보건·안전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의 주요 초점은 동구의 주요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데 있다. 2023년 동구에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살과 전염병 분야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참석자들은 동구의 안전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인식지표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자살예방 사업이 주요 관심사로 강조되며,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동구 전체 주민의 장기적인 안전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실행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제8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성황 속 피날레

일시: 2024. 10. 4. ~ 5. 장소: 대전 119시민체험센터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제8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리 모두 안전 영웅!'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대전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내빈들이 함께 연출한 개막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들로 진행됐다. 또한, 대전시 홍보대사인 가수 성은지의 팝페라 공연, 퓨전국악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이루어졌다. 안전과 관련한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준비와 행사 진행도 빛났다. 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모니터링을 했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다양화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 범죄예방 제고를 위한 CPO 간담회

일시: 2024. 10. 7. 장소: 대전광역시청 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7일, 각 경찰서의 CPO(범죄예방진단 담당관), 대전시 안전정책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범죄 현황과 지역별 범죄유형 및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데이터 핫스팟 분석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 범죄 유형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전시 안전정책과 김영진 과장은 "우리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전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점검

일시: 2024. 10. 15. 장소: 대전광역시청 소회의실



대전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목표관리제 추진 상황 점검·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범죄·화재 등 취약 분야 관련 부서, 자치구, 소방본부와 대전경찰청,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안전지수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상황과 대책을 공유하고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화재 분야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범죄·화재 분야 체감형 안전시책 발굴·추진, 도시안전연구센터 협업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시민안전문화 확산, 지역안전지수 협업

TF팀 지속 운영 등 업무 관련 담당자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센터장,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 등 안전지수 전문가와 함께 지표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별 안전등급 개선을 위한 전략과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과 건의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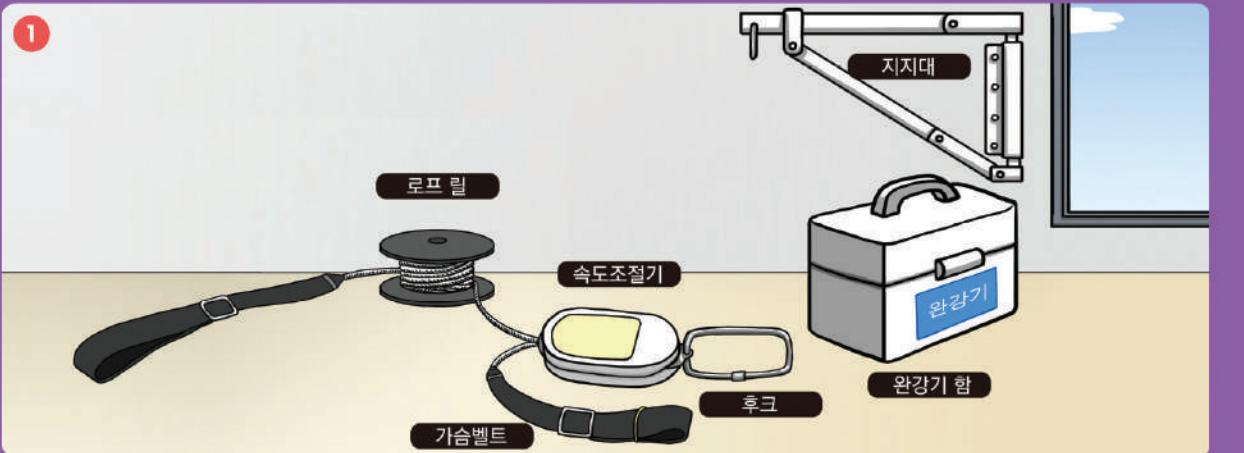


위기탈출!!

#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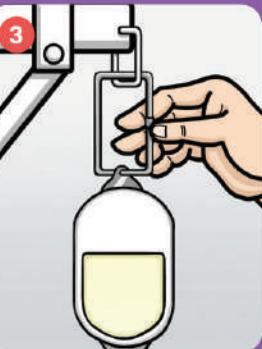
## 9단계 완강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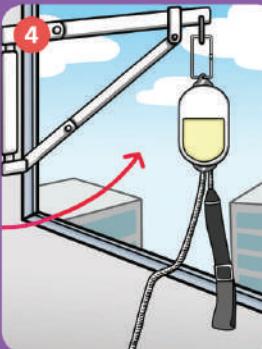
완강기 함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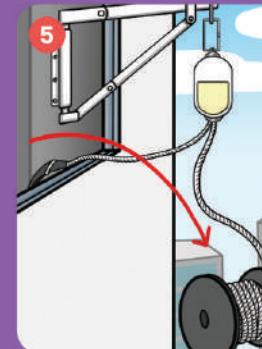
완강기 함 안에서 속도조절기와 벨트를 끄냅니다.



지지대 고리에 속도조절기의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빠지 않도록 합니다.



지지대 고리가 창 밖으로 위치하도록 창 바깥쪽으로 맍니다.



줄이 감겨있는 릴을 창 밖으로 던집니다.



가슴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겁니다. 이때 팔을 들지 말고 겨드랑이 밑으로 꼭 맞도록 끼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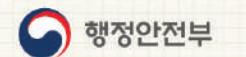
가슴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둘레만큼 충분히 조입니다.



다리부터 창 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갑니다.  
체중이 실려도 속도조절이 되어 추락하지 않습니다.



처음 건물에서 떨어질 때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강을 시작하고 이후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소화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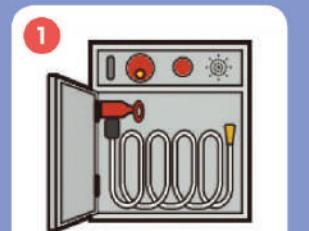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씁니다.

**소화전**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틱터어서 불이 끼지도록 합니다.